

# 형사소송법

## 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 ②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 ③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④ 고발인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포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2.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
-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 3.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 ③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만 할 수 있다.
- ④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 4. 진술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③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5.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3.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 할 수 없다.
-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1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 ③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5. 다음 중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접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 ② 소환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강제처분이다.
- ③ 소환은 직접강제에 해당하나 제출명령은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 ④ 피의자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1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도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상의 즉시고발에도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17.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 ③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8.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9.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②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③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 ① 피고인의 진술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 ③ 공판조서                            ④ 증거물인 서면

22.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3. 현행법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4. 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5.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6.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시의 흥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7.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녹음파일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9.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③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0. 압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 통신상 비밀이 있다.
- ②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 ③ 군사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감정인, 간호사 등은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31. 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32.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③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 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3. 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 ㉡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꺾불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 ㉢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 교사 甲이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乙이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5.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37. 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 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 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 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 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3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 된다.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40.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 ④ 압수물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